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태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713
----------	-------

발의연월일 : 2025. 6. 11.

발 의 자 : 임태영 · 조지연 · 박덕흠  
김재섭 · 박충권 · 이양수  
이만희 · 윤한홍 · 서천호  
김상훈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귀임업인·귀산촌인에 대한 지원 근거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에 포함되어 있음.

그런데 산촌은 산림면적이 현저히 높고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으로서 농어촌에 비하여 거주 환경이 더욱 열악하고, 현행 귀농어·귀촌 지원 사업이 임업 및 산촌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귀임·귀산촌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청년 및 중장년의 산촌 유입을 촉진하고 귀임업인의 소득 기반을 확충하는 등 산촌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5년마다 귀임·귀산촌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안 제24조의2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귀임업인·귀산촌인에 대한 정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3 신설)

등).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호의2 및 제6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귀임업인”이란 산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임업인이 아닌 사람이 임업인이 되기 위하여 산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의2. “귀산촌인”이란 임업인이 아닌 사람 중 산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3조제7항 중 “제24조”를 “제24조, 제24조의2”로 한다.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귀임·귀산촌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청장은 귀임업인과 귀산촌인의 안정적인 산촌 정착 및 임업 경영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귀임·귀산촌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귀임·귀산촌 지원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귀임·귀산촌 현황과 전망
2. 귀임·귀산촌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3. 귀임·귀산촌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귀임·귀산촌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 인력의 육성 방안
  5. 귀임·귀산촌의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
  6. 귀임업인과 귀산촌인의 주거, 생활 및 임업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7. 귀임·귀산촌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방안
  8. 그 밖에 귀임·귀산촌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산림청장은 귀임·귀산촌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귀임·귀산촌 지원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5년마다 귀임·귀산촌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24조의3(귀임업인·귀산촌인 등 정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임업인과 귀산촌인이 안정적으로 임업을 하거나 산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금 지급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임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 또는 귀임·귀산촌을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업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의4(귀임 초기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임업인이 임업에 종사하기 시작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자연재해 등으로 안정적인 임업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임업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귀임업인에 대한 지원기준과 대상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5(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임업인 및 귀산촌인의 생활안정, 임업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귀임업인·귀산촌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알선
2. 귀임업인의 창업에 필요한 자금·기술·경영컨설팅 지원
3. 귀임업인·귀산촌인의 일자리 및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임업인 및 귀산촌인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주택을 구입·신축·수리 또는 임차하거나 삼림주택 공동체 시설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자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6(귀임·귀산촌 지원에 관한 자료요청 및 지원정보의 확인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귀임·귀산촌 지원 및 사후관리를 원활히 하고 지원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

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을 받거나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재배장 등을 출입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9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6(지원금의 환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4조의3부터 제24조의5까지에 따른 지원금(이하 이 조, 제32조의2, 제33조에서 “지원금”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반환할 사람이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기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제3항 중 “산림청장은”을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산림조합이나”를 “산림조합, 제27조의3에 따른 지원센터나”로 한다.

제31조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1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귀임·귀산촌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산림조합, 지원센터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귀임·귀산촌 지원에 관한 적용례) 귀임·귀산촌 지원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산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 (생략) <u>&lt;신설&gt;</u>	제2조(정의) ----- -----. 1. 2. (현행과 같음) 2의2. “귀임업인”이란 산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임업인이 아닌 사람이 임업인이 되기 위하여 산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 6. (생략) <u>&lt;신설&gt;</u>	3. ~ 6. (현행과 같음) 6의2. “귀산촌인”이란 임업인이 아닌 사람 중 산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7. 8. (생략) 제23조(산촌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⑥ (생략) ⑦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제24조, 제25조 및 제28조에서 같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성을	7. 8. (현행과 같음) 제23조(산촌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제24조, 제24조의2,----- -----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도  
· 특별자치도 산촌진흥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⑧·⑨ (생략)

<신설>

-----  
-----  
-----  
-----.

⑧·⑨ (현행과 같음)

제24조의2(귀임·귀산촌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청장은 귀임업인과 귀산촌인의 안정적인 산촌 정착 및 임업 경영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귀임·귀산촌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귀임·귀산촌 지원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귀임·귀산촌 현황과 전망
2. 귀임·귀산촌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3. 귀임·귀산촌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귀임·귀산촌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 인력의 육성 방안
5. 귀임·귀산촌의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
6. 귀임업인과 귀산촌인의 주거, 생활 및 임업 경영 지원

<신 설>

에 관한 사항

7. 귀임·귀산촌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방안

8. 그 밖에 귀임·귀산촌 지원  
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귀임·귀산촌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귀임·귀산촌 지원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  
하여 5년마다 귀임·귀산촌 지  
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하여야 한다.

제24조의3(귀임업인·귀산촌인  
등 정착 지원) ①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귀임업인과 귀산촌  
인이 안정적으로 임업을 하거  
나 산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금 지급 등 필요한 사  
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신 설>

<신 설>

산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임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 또  
는 귀임·귀산촌을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  
업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  
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24조의4(귀임 초기에 대한 지  
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는 귀임업인이 임업에 종사  
하기 시작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자연재해  
등으로 안정적인 임업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임  
업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귀임업인에  
대한 지원기준과 대상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5(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귀임업인 및 귀산촌인의 생

<신 설>

활안정, 임업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귀임업인·귀산촌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알선

2. 귀임업인의 창업에 필요한 자금·기술·경영컨설팅 지원

3. 귀임업인·귀산촌인의 일자리 및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임업인 및 귀산촌인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주택을 구입·신축·수리 또는 임차하거나 산림주택 공동체 시설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자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6(귀임·귀산촌 지원에 관한 자료요청 및 지원정보의 확인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귀임·귀산촌 지원 및 사후관리를 원활히 하고 지원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을 받거나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재배장 등을 출입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 설>

제29조의6(지원금의 환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4조의3부터 제24조의5까지에 따른 지원금(이하 이 조, 제32조의2,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② (생략)  
 ③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산림조합법」  
 에 따른 산림조합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3조에서 “지원금”이라 한다)  
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  
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  
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반  
환할 사람이 해당 금액을 반환  
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강제  
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  
수기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  
는-----  
-----산림  
조합, 제27조의3에 따른 지원센  
터나-----

제3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2. (생략)

<신설>

<신설>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략)

<신설>

제3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  
-----  
-----  
-----.

1. 2. (현행과 같음)

3. 제31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귀임·귀산촌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산림조합, 지원센터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제32조의2(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벌칙) -----  
-----  
-----  
-----.

1. ~ 4. (현행과 같음)

5.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u>용도에 사용한 자</u>
--	------------------